

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5월 19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5. 19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 김진철)

□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」 권고 과제와 국무총리 지시사항 「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」를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을 내실화 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등의 범위 확대 추가(안 제2조 제1호)
- 나. 보상금 환수방법과 관련된 조항 삭제(안 제20조)
- 다.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구체화(안 별표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20. 3. 30. ~ 4. 20.) 결과 : 의견 없음
 - 2) 규제 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배금택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」 권고안과 「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」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강서구가 출자출연·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하는 등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,
- 안 제20조는 보상금 환수를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것이 법률에 근거없는 의무부과와 강제처분에 해당되는 것임에 따라 조항을 삭제함
- 안 별표에서는 지급기준별 보상금액에 “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행위”에 대한 지급기준 및 보상금액을 추가함

○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·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」 권고안에 따라
- 부패행위 신고대상 공직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,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 포상금 환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,
- 현 규정상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예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공직자윤리법

제3조의2(공직유관단체)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,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한국은행
2. 공기업
3. 정부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·단체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·보조를 받는 기관·단체(재출자·재출연을 포함한다),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·단체
5.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·동의·추천·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·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·임명·위촉하는 기관·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